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농식품분야

-소요예산 178조 중 농업분야는 1조1천억 불과 농업계 비판여론 고조-

- 전략 :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재건 위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3대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인상.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한민국정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필요 자원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숭고한 민주주의 실현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내 심을 책임지는 국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국제협력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총 178.0조원* (2018~2022년)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

2017년 5월~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기' → 2019년~2020년: 2기 '도약기' → 2021년~2022년 5월: 3기 '안정기'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방 이전예산 및 제도 설계 후 추정

- ▲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수확기 수급안전방안 시행. 내년부터 2년간 생산조정제도 한시도입
- ▲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첨단스마트팜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양성,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도입,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 실시
- ▲ 지속가능한 농산업 기반조성은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소등 협치행정 확산. 그 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
- ▲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이 없고, 중소농 강화대책 없이 박근혜가 강조한 6차산업, 스마트농업이 재등장하는 등 과거 답습에 그치고 있다"며 혹평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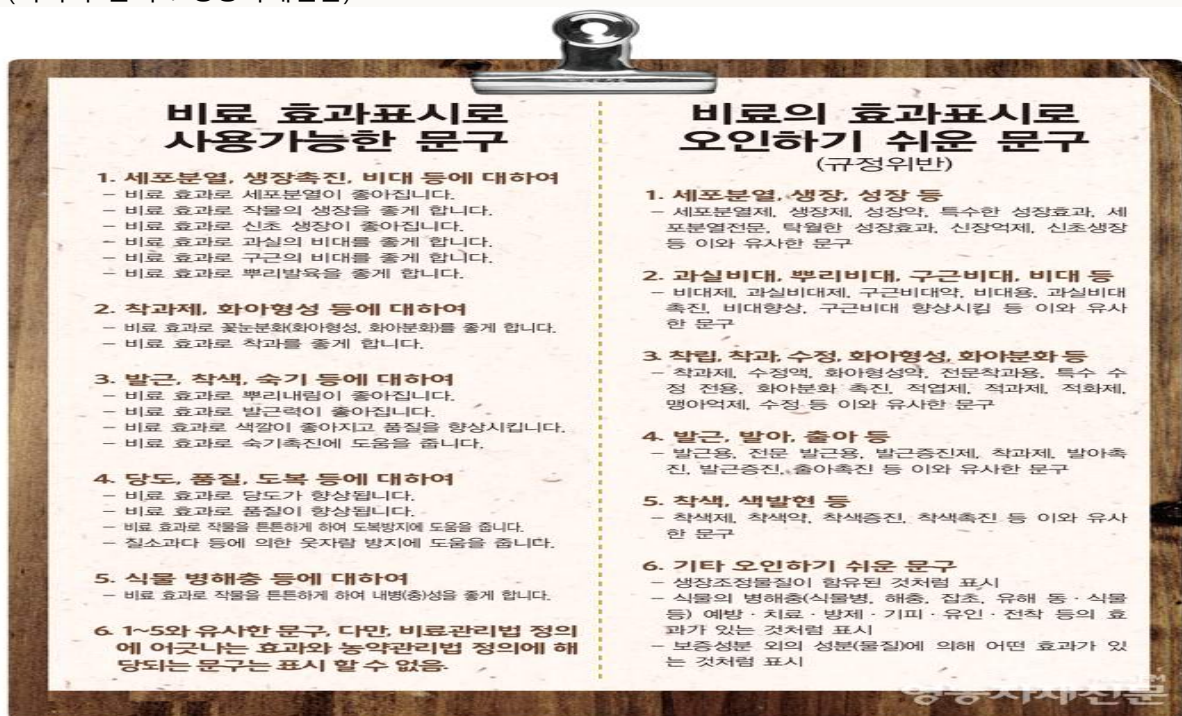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성명서”

농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국민참여형' 국정과제 선정에 농업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적폐 연장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현장의 개혁요구에 부응하라!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우리 농정의 목표로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비료 과대광고 표시기준지침 시행

“유기농업자재도 본기준에 준해서 시행해야” -8월23일경 당회 관련교육예정-

- ▶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23일 4종 복비 및 미량요소복비 등 비료의 경우 '표기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한 공문을 당회 및 전국 시군구청에 발송했다. 당회가 2013년 1월 공정위와 농진청이 협의 마련한 “제4종복비 및 유기농업자재 표준광고 가이드라인”을 주축으로 작성한 것이다. 배경은 박완주의원 주관 비료관리제도개선방안에서 미량요소 및 유기농자재 등 과대광고 규제여론에 따른 것이다.
 - ▶ 따라서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비료관리법 개정중). 또한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표시광고법 제17조)
 - ▶ 유기농업자재는 6월 3일부터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에 한해서만 표기할 수 있다. 허위 광고시 규칙 별표13에 따라 1회 위반시 판매금지, 2회 위반시 공시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받은 제품을 허위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 ※ 실제로 모 전문지에 병해충명을 적극광고한 한 업체가 제삼자 고발에 의하여 경고처분과 함께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과대.허위광고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조치로 작물생육용 자재는 비료로 동시 등록된 경우가 많으므로 “비료의 과대.허위광고 문구”에 준하여 조속히 표시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영농자재신문)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농업개혁 대토론회' 발언요지



-전농, 농업개혁·적폐청산, 농민수당지급 주장-

2017. 7. 18.(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농이 주최한 '농업개혁 대토론회'에 참석 김장관은 축사를 통해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농정을 개혁하겠다"는 정책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은 당면 현안과제로 ① 쌀값 회복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② 상시화 되고 있는 가축질병의 근본적 대책 마련, ③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④ 청탁금지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⑤ 축산계열화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등 농정개혁 추진 방향을 표명하였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농업인들의 현장애로를 챙기는 한편, 농업인과 머리를 맞대고 농정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농식품부에 농정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제27대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 취임사



지난 7월23일 취임식에서 "쌀 과잉생산, 가축질병 상시화 등 농업 현안에 대한 청의 역할을 돌아보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선제적인 미래 농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승용 농진청장(61)은 1976년 농림부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8급 기술직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 농약연구소, 원예연구소, 연구정책과장, 연구정책국장, 축산과학원장, 농업과학원장, 농촌진흥청차장 역임 등 농촌진흥청 대부분의 소속기관 근무경험을 지녀 농진청 업무에 가장 해박한 정통파 농진청맨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전북대 석좌교수로 활동해 왔다.

◎2017 상반기 농자재산업 결산과 전망

-가뭄으로 농산물 재배면적 축소와 농산물가격 불안정, 농심위축 농자재 사용감소를 상반기 농산업분야는 가뭄, 농산물가격하락 등 농업환경 위축에 따라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내수부진에 따라 농산업계는 해외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수출 역시 해외기업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작물보호제, 가뭄과 고온건조...병 발생적어 '살균제 재고문제' 재 부상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적어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됐지만 팜한농의 정도 경영으로 나머지 업체들은 나름 선방, 팜한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지난해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해소됐던 살균제 재고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 내년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 무기질 비료, 벼 재배면적 줄어 판매량도 5~10%정도 감소

농협의 비료 판매량이 전년대비 10%로 감소, 단비는 6% 감소, 복비는 11% 감소, 이중 맞춤형은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면적이 5천ha로 줄어 든데다 가뭄으로 1만3천ha가 피해를 입어 벼 재배면적이 총 1만8천ha 감소, 1만톤 이상 비료판매가 부진하였다. 특히 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토양에서 비료를 녹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고 모내기 시기 일실과 발작물 가뭄영향 작황이 안좋아 판매량이 5~10% 감소추세를 보였다. 무기질비료 수출도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2011년 이후 수출물량이 지속적 하락 추세로 지난해 톤당 평균 239달러였던 요소가격이 올 1월 266달러로 인상됐지만 무리한 농협의 농자재 비용 경감방침으로 입찰가격에 원자재 인상분이 미반영, 업계는 손실 최소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감 방침이 내년도 지속될 것이므로 내년 전망도 어둡다

▶ 유기질 비료, 가뭄 · AI 발생으로 공급목표 달성률 80% 정도에 그쳐

올해 유기질비료는 지난해와 같이 국비 1600억원과 지방비 900억원 등 총 2500억원이 투입, 320만톤이 농가에 공급됐다. 상반기 가뭄이 지속되고 잇단 AI 발생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작년대비 2.2% 가량 공급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퇴비는 전년 동기 대비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박비료와 퇴비의 매입 총량은 지난해 약 223만8654톤에서 약 224만8047톤으로 9393톤 늘어나 성장률은 0.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량은 크게 줄지 않았으나 퇴비업계는 물론 유박업계의 실제 체감 판매량은 훨씬 낮아 매출액 감소를 우려하는 업체가 많다.

▶ 식물영양제 포함 유기농업자재 역시 5%정도 감소

식물영양제는 과수 및 시설원예작물이 가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수요가 전년대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기농업자재는 작년부터 친환경농업이 5.8%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고, 일부 지자체 보조사업 재개로 수요가 다소 늘었으나 농약 비료와 연계된 산업특성상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매출감소가 된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2017 농산업 수출 상담회(BKF) 매칭 등으로 신규 매칭이 늘어나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비의도적 농약검출로 인한 친환경 인증취소, 대책마련 시급

-비산 방지 위한 노력에도 피해농가 구제대책 전무-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서 운송시 일반 농산물과 뒤바뀌거나 비산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혼입 피해로 인증 취소 농가 구제책 요구 목소리가 높다. 나주에서 친환경 피망을 재배한 강대호씨는 4가지 농약이 검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으나 재조사 결과, 운송과정에서 농약이 섞인 일반 농산물이 혼입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이나 GAP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웃농가가 살포한 농약 비산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어 문제다

▶농관원은 강씨에게 사과했지만 피해보상은 없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농관원은 "비의도적 농약검출을 다 보상해 주는 건 어렵다. 비의도적 검출 확인을 거쳐 인증취소 번복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7/21 농정신문기사)

●농약안전관리 국회토론회...누구를 위한 PLS 인가...단계적 시행 바람직



지난 19일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 주최로 '안전 농산물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말 PLS(허용농약 목록관리제도)가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내년 전격 시행되면 국내 부적합농산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다.

- ▶ PLS 도입 배경 : 일본 등은 모든 수입 농산물에 PLS를 적용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PLS제도가 없어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기준치가 높아 수입농산물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우리 수출농산물은 엄격한 PLS기준을 적용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 그러나 막상 전면 도입시 부적합율이 지금보다 2배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안으로 그룹MRL 제도 도입 및 농진청이 식의약처에 PLS의 단계적 실시를 건의했지만 식의약처는 콧방구로 향후 시행시기를 두고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 ▶ 전남대 심재한 교수는 "소면적작물 등록농약이 부족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PLS가 도입되면 소면적작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반면 황선옥 소시모이사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 공급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 ▶ 박완주 의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만큼이나 사전 예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PLS에 대처할 소면적 등록농약이 부족한데 무리한 전면시행은 안된다. 어려운 농민실정을 감안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퇴비 불법 불량원료 사용퇴비 유통문제 심각

-폐수·하수처리오니, 축산슬러지 등 불법 퇴비원료 저가유통 품질불량 초래-

- ▶ 지난 7월 4일 대전 유성에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교육에서 퇴비 불량원료사용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하수처리오니, 축산슬러지 등을 이용한 불량원료가 불법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퇴비업체로 공급되어 불량퇴비로 생산돼 저가로 유통되면서 비료생산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지역별로 불법원료를 취급하는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파악해 고발조치 등 조합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고 조합측은 밝혔지만, 폐기물차량 추적 등은 강력한 사법권을 가진 검경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올바른시스템에 의거 환경부처 및 농진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폐기물 역 추적 등 특단의 제도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설하우스 토양 61%가 염류농도 과다

-딸기시설재배단지농가중 뿌리썩음선충 감염농가 56%, 뿌리혹선충 감염 37%-

- ▶ 충남도원에 따르면 농진청과 함께 시설재배지 토양화학성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염류농도 기준치를 넘는 곳이 6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적 염류의 주성분은 △질소 △황 △나트륨 △염소 △인산 등 화학비료와 가축분 부산물퇴비에 함유돼 있다
- ▶ 염류과다는 연작장해와 작물 양·수분흡수저해 생육불량 초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협중앙회, 하반기 농자재사업 추진전략회의

-사업활성화 통해 영농지원 강화 결의-



농협경제지주 자재부는 지난 14일 서대전역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하반기 자재사업 추진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자재사업 각 팀장과 지역본부 단장이 참석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사업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 시스템 개선 토론을 실시하였다. 김용식 자재부장은 "농가소득 5천만원 조기달성을 위해 효율적 영농지원을 당부했다"

◎장마 1주일 더... 농진청 병해충주의보 발령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 진딧물, 탄저병 등-



오랜 가뭄이 농심을 애태게 하더니 본격 장마기로 진입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지속돼 농민들은 한 시도 안심할 수 없다.

장마철에는 고온 다습으로 탄저병 등 각종 병이 만연 농작물 병충해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농진청은 멸강나방, 채소바이러스병,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응애, 진딧물 등 해충 주의보를 발령 장마기간동안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멸강나방,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 진딧물 : 주의보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 주의보
- ◆사과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 탄저병, 복숭아 세균구멍병 등 : 예보
- ◆과수 잎말이나방, 각지벌레, 노린재류 등 : 예보(정밀예찰 발생초기방제)

◎아직도 밀수농약있다? 단속강화로 사용량 줄지만 가격저렴해 거래성행?

-지베렐린도포제 등 밀수농약 범람 과수농가 40~50% 사용, 근절시급?



밀수농약은 단속강화와 국산제품 판매가가 낮아지면서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40~50%의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밀수농약은 주로 생화학살충제인 아바멕틴과 식물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이다. 관세청은 작년부턴 올 6월말까지 밀수농약 8건을 적발 1억7800만원 상당액을 폐기처분했다. 밀수농약은 중국과 교류가 많은 배봉지,꽃가루, 팬컵 판매업자들이 일선 농가를 순회 직거래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농기자재신문 7.17자 기사)

◎고향세 도입 본격적 가시화

-행자부, 실무회의 수차례, 기재부 법 개정 추진, 반대 움직임도..설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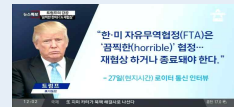
-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세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고향세의 기부 대상 지자체, 기부금 모집 방법,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기획재정부도 조만간 발표할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고향세 도입안을 담는다
- ▶대도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고향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공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입을 위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일본은 '고향세' 지난해 2조9천억이나 걷혔다.

◎정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착수...개선안 12월까지 마련한다

-농축산업 위축 호소 잇따라 허용가액 상향조정 검토-

-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 허용가액인 이른바 '3·5·10 규정'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해 올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농축산물 소비위축으로 피해호소 10개월 만이다.
-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상 음식물·선물 허용가액 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재협상... 보호무역 칼 빼든 트럼프



-트럼프 "한국과의 무역에서 400억달러를 잃고 있다" 쌀, 쇠고기 관세 올린하, 농약잔류허용기준, GMO 수입 허가제 등 이슈화

- ▶미국이 예고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서 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국측 요구가 워낙 강해 개정협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불만은 자동차·철강·농업이다. 농업중 불만은 쌀과 쇠고기로 쌀의 새로운 쿼터와 현 24%인 쇠고기 관세올인하를 요구할 전망이다. 무역대표부는 '한국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MRL)▲GMO수입허가제 등도 미국산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이 '적폐 청산대상' 된 이유

-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농정 대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 개혁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구조 개편은 조합의 정체성을 더욱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전국협동조합노조가 국정 기획자문위에 제출한 '농협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협개혁을 가로막아 온 적폐는 '정부, 정치권, 농협중앙회, 일선 조합간 거미줄 같은 유착동맹'이라고 지목된다.
- ▶적폐와 '농피아'를 청산하고 지주회사체제를 해체 정체성을 회복하는게 개혁의 핵심이다. 농협 개혁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농정 대개혁도 농민의 협동조합이 제구실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협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농어민신문 7/18자 기사)

◎농식품부, 추경예산 6835억원 투입 가물대책·가축질병·일자리 확대

이번 추경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선제적 가물 대응 및 가축질병 예방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편성되었다.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 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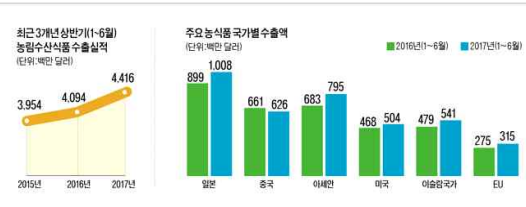
◎영호남농업인 화합한마당 "남해안시대 농업·농촌 공동번영 이루자"



한농연,한여농경남도연합회, 한농연,한여농전남도연합회 는 지난 10일~11일 경남 밀양 에서 '제13회 영호남농업인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경남·전남의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들은 구시대의 잔재인 지역주의를 말끔히 타파, 남해안시대 농업·농촌의 공동번영을 만들고자 매년 영호남을 오가면서 13년째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업 수출]

◎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44억달러 '사상최대'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보다 7.9% 증가한 44억1620만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달성했다. 품목별로 김이 상반기 수출 첫 2억 달러 달성 등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인삼류와 딸기 등의 품목도 상승세를 끌고 갔다. 반면 중국시장은 사드와 AI 발생 등 후폭풍으로 2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등 올 반토막 날 예정이다.

◎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수출 新전략

-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상품육성, 민간주도의 중국 특화 상품모델 개발
- ▶ 온라인모바일 진출 활성화 : 중국 식품전문 온라인모바일 판매 플랫폼을 확대, SNS 마켓플랫폼 '웨이상' 활용 新유통망 진출, 거래상담회(8월, 10월) 추진
- ▶ 신규 오프라인 판매처 개척 : 맞춤형 상품을 기반으로 편의점현지 외식기업 등 신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협회한상조직 등 신규바이어 발굴 등이다

◎ 미 식품안전 가이드라인 제시...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한 식품안전계획

- ▶ 농식품부는 대미 식품 수출업체대상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 ▶ 미국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을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발효했다. 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수출 모든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강제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시정조치' 및 '검증'과 '회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 실용화재단, 우리 농식품 47만달러 베트남 수출계약

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 7일~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건강기능식품 유통품 평회와 세미나, 현지중산층을 겨냥한 홍보프로모션행사를 진행했다. 베트남진출 희망 7개 농산업체가 참가, 베트남 현지유통점의 상품기획전문가 등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통해 47만달러 계약실적을 올렸다.

◎ 엔화환율 최대 762원까지 하락 전망...파프리카·화훼 일본수출 위기

BNP파리바 은행은 가장 낮은 762원으로, 모건스탠리는 841원, 로이드는 921원으로 보고 있다. 엔화 환율이 최대 700원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농협은 일본 수출이 절대적인 "파프리카와 토마토, 장미, 백합 등이 엔저 현상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환보험, 손실보전 자금지원 등을 건의했다.

[친환경 농산업 소식]

◎생명환경농업전도사 이학렬 전 고성군수



“생명환경농업이야말로 도시·농촌 상생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인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생명환경농업중심 생명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는 '5차 산업혁명'을 제안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전국 190곳에서 1주년 기념행사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 파머스마켓'을 지난 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했다. 또한 2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비롯 전국 190곳에서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산 유기농버섯, 中소비자에게 인기



중국 버섯시장을 공략키 위한 고품질 유기농버섯이 개발돼 중국에서 홍보행사가 열렸다. 칭다오 시내 팍슨, 마이칼백화점, 이화원 마트에서 맛 체험 등 국산 유기농버섯의 우수성을 알렸다. 중국인들은 유기농버섯 구입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안전성을 꼽아 중국산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전남도, 대규모 친환경 물류센터 설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활성화



전남도는 나주시 산포면에 건립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준공을 앞두고 친환경 산지유통업체와 협력키로 했다. 협의회에서 친환경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 물류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유기농 혁명이 답이다! 미래다! 죽음의 먹거리 정책에서 벗어나는 길

▲지난 9년간의 '이명박근혜' 정권하의 농정은 反자연·환경, 反국민소비자, 反농민 정책 일변도였다. 親자본, 친기업 위주의 反생명 농정이었다. 친환경농업은 억압받고 대신 GMO와 제초제 등 화학 의존형 농업이 주류였다. 지난 정권은 미국식 대기업자본의 아바타로서 탈 친환경농정을 시행해왔다.

▲문재인 농정 역시 불안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유기농업 혁명'으로 정진할 때, 유쾌한 농부 행복한 농촌, 건강한 소비자들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4%(OECD국가 중 최하위), 1인당 해외식품 수입량 세계 최고 (468kg, 일본의 1.3배)이다. 온실가스 발생량 세계 7위, 온실가스 연 증가율 1위, 석유소비 5위, 지구 평균2배 기온상승 등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인위적 재앙요소들로 휩싸여 있다.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 '균형사회' 건설, 세상이 몇 십번 뒤집혀져도 인류가 지속하기 위해선 양질의 좋은 식량과 친환경 유기·자연농업의 중요성은 영원하다.제발 노동자, 농민들을 울리지 말라. 짓밟지 말라. 더 이상 백남기용 같은 비극을 만들지 말라. 성년 민초들의 원성이 하늘을 뚫고 천광에 메아리 칠 때 民心이天心이 되어 지상으로, 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지 누가 아느냐.

▲학자들이여 관료여, 제발 그놈의 '효율, 이윤, 경쟁력, 국익, 개발'이라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그만큼 오래 써먹었으면 숨 좀 쉬며 친환경, 친자연, 친서민적인 발상으로 바꿔보라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농정신문 농사직설(7월) 기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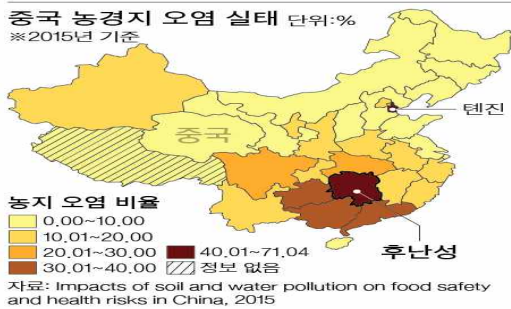
[해외 단신]

●중국 농경지 생태파괴심화, 중국정부, 토양정화 위해 800조원 투자한다

-후난성 농지 40% 오염... 중국 '카드뮴쌀' 비상(6.20 중앙일보)-

중국산쌀 중금속오염 파문, 유기농 수입급증..일본산 친환경쌀 인기, 한국 유기농진출 단초 기대

■ **중국의 토양 오염실태** 중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무더기로 매립하고, 소출을 늘리기 위해 유독성살충제와 화학비료를 무분별하게 남용한 결과 대기·수질과 마찬가지로 희토류, 석탄 등의 광산개발과 산업폐기물 및 중금속 폐수등 투기로 인해 토양오염 심각한 수준 : 중국경작지 20%에 해당하는 2천만ha 이상 오염



■ 전국토양 16%가 오염기준 크게 초과 생산성 10%나 저하, 토양오염으로 인해 매년 1200 만톤의 곡식이 오염되며 경제적 손실액은 200억 위안에 달함

■ 토양 오염 유발물질: 카드뮴 7%, 니켈 4.8%, 비소 2.7%, 구리 2.1%, 수은 1.6% 등 여러 독성 중금속 물질과 BHC, DDT,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인구밀집 동쪽 지방에서 토양 오염 확산 추세

※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시 토양정화시장규모 40조원 초과 예측(누적 투자액 800조원 규모)

●중국의 농약시장, 친환경농약 선호 (KOTRA 중국 선양무역관)

-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농작지 면적은 20억 묘(畝*)를 초과
- 중국의 연간 농약 소비량 ; 약 180만톤
- 중국의 농약 매출액은 2008년 1천88억위안에서 지속성장 2015년 3천13억위안에 이르렀으나, 2011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
- ▶ 2021년 매출액기준 6969억위안 규모 전망
- 2016년 중국의 농약 수입액은 6억7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 감소



※ 시사점 : 정부 바이오기술 산업화 프로젝트'에 바이오 농약 개발이 포함, 정책적 지원 연구 지속 확대중, 생물 농약 등 친환경 농약 시장이 지속 확대 전망
중국 농업 현대화 추세에 알맞는 솔루션형 제품 개발 필요 ▶ 결합 팩키지 수출

●유럽 · 미국 가뭄 극심, 국제곡물가 심상찮다

- 미국·호주, 강수량 예년절반 밀 생산 급감...USDA 올해 봄밀 생산량이 2002년 이후 가장 적은 4억2300만부셸(1부셸 27.2kg)에 그칠 것으로 추정...가격 급등 우려
-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폭염에 산불까지...올리브·아몬드 등 수확량 20년 최저치

※농식품부 인사(7/25일자 실장급 전보)

- ▲안호근 차관보 ▲김경규 기획조정실장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
- 과장승진 ▲김신재 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유기농자재담당)
- 과장급전보▲이덕민 기술서기관 창조농식품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